

투데이 칼럼

“농민들이 웃어야 나라가 웃는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회 핵심 공공산업이자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인류 지킴이 산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산업이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던 농업은 국민총생산(GDP)의 3%정도라는 기여도와 몇%의 소득 증가율을 달성하였느냐의 수치이래 계산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 인구 중 농업인구가 5%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입각하여 농업을 시장 산업으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아 외국에서 자원을 받던 어려운 시절에도 농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200배나 증가했고, 현재 당당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농업이 식량과 공업원료 공급기지, 환경보전의 원천이 되는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장소 등 자연적·환경적·물질적 측면의 가치로서 중요하게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농업 농촌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경제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농촌이 가진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자원화하며, 이를 소득으로 연결하는 6차 산업이 그것이며, 이제 우리는 6차 산업을 통한 농업의 미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농업과 농촌은 건강을 팔고 시간을 파는 하나의 산업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다.

농업인도 이미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라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듯 당당히 농가소득을 추구하는 CEO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농업인 스스로가 농업을 전문화하고,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소비자의 수요와 기호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업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고부가가치의 농업기술개발과 기술보급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첨단 산업 못지않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농업을 단순히 수치화 하여 등한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술년 한해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춘분이 지나고 얼마 있으면 청명 한식이다.

금년 농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다.

우리군은 28일 군 농민회 주관으로 풍년기원 영농발대식을 개최하여 풍년농사를 다짐했다.

우리 농민들도 금년 농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알찬결실을 이뤄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재값 받는 농산물로 소득을 올려 맘껏 노력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곧 우리장수에는 온 산과 들에 장수사과꽃, 장수오미자꽃 등 온갖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날 것이다. 부디 이와 같이 농민들의 얼굴에도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그간 우리 농업 농촌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쌀농사도 가을에 추수 후, 벼 재고로 인해 공공비축미 수매량이 줄고 쌀값이 하락해 농민들

의 얼굴에 웃을 날 없이 주름만 가득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로인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역대 최초로 쌀 가격 형성 전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고, 2010년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을 포함한 총 72만톤을 매입하여 쌀 시장을 안정화하고 쌀값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차원에서 금년에도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얼마 전 참석한 쌀 생산조정제 관계관 연석회의에서 정부관계자는 현재 쌀 재고량이 40만톤으로 금년 수확기에는 쌀 추가 격리가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벼 재배 농지 755천 ha에서 50천ha 감축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농지 또는 벼 재배시설 확인 농지를 대상으로 논공, 조사포 등을 재배하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4월 20일까지 해당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우리군에서도 쌀 생산량 조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가에 적극 홍보하는 등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기관 및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못자리 상토 매트 지원, 고령은 육묘 지원사업 등 농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은 년 61.8kg으로 갈수록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쌀 가공 산업 활성화와 밥 먹는 식문화 확산을 통하여 소비축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중일 및 아세안 10개국 간 쌀 비축기구인 '에프터(APTERR)'를 통해 해외의 이체민 긴급구호용으로 지원 하는 등의 벼 재고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 정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벼 재고량 해소에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해본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수확의 기쁨과 함께 주름진 농민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새 정부가 농업 농촌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농업은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며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며 이는 곧 식량 안보차원과 직결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을 농업이 든든히 지키고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당히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흔한 공기나 물처럼, 우리는 평범한 것들이 우리 일상을 좌우하는 위대한 선물임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농업이라는 가장 평범한 “선물”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업,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농민들이 웃어야 나라가 웃는다.

김성수
장수군 농업정책과장



사설

전북도는 희망의 근거가 돼야 한다

전북도는 정신을 차려야겠다. 들리느니 압담한 소식의 연속이다. 전북도는 이 어려운 때에 희망의 근거가 돼야 한다. 사실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은 아닐지라도 잃는 시간을 내줘야겠다. 도내 언론사들의 사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재미없는 사설이라도 시대의 공기의 흐름을 읽는 정도는 될 테니까 말이다. 전북도는 저번에 투 트랙 전략으로 돌과구를 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의 발언이라도 도민들은 마음이 급하다. 전북도의 그 전략이 희망의 근거가 되는지 지금 확인해줄 일이다.

우리 지역은 거둬들인 경제 우환으로 한탄 소리가 가득하다. 지난해 군산 조선소의 가동 중단 사태에 이어 올해는 서남대 폐교 확정과 군산 GM의 폐쇄로 전북 경제가 지진을 만난듯 흔들리고 있으니 아니 그러겠는가. 전북 경제의 혼란은 정부의 고만거리로 떠오를만큼 중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게 그뿐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마음이 안타까움과 분노로 뜨거워지고 있는데 전북도는 여전히 속수무책의 모습이다. GM 군산 공장의 남은 직원들을 부평으

로 창원으로 가족 동반해 이전시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다.

전북도는 더 뛰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을 상대로 저력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자존을 말하고 제류 찾기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어려운 것 무성이다. 도민의 바람과는 반비례하여 일자리 추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말해야겠다. 전북도가 88개 사업을 발굴해 3조666억원대의 예산을 정부에 건의한 것 말이다. 그게 곧바로 실효 가능한 것인지 도민에게 말해주어야겠다. 전북도는 도내 언론사들의 보도에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한다. 두 달 새 4012명이 줄었는데 군산소재 534명이 타지로 빠져나갔다.

우리 지역이 웰빙 고장이 못 되고 있음은 도민의 수가 말하고 있다. 작금의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욱 심각한 ‘탈전북’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GM이 군산에 남아서 지역 일자리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은 정답이 없다. 전북도는 희망의 근거가 돼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에게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 전북도는 지금 너무나 무기력하다.

인구 감소 해결책 찾아야 한다

전북도는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그 중에 우선적으로 꼽히는 게 인구 감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인구 감소 폭이 제일 컸는데 올해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인구의 감소와 관련해서 고민해야겠다.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다. 인구 유출이 매달 계산 되는 판에 속수무책은 말이 안된다.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면 앞으로도 역전될 기미는 없다. 전북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 해 전부터 그런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그러고 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가 인구 증가 요인이 된다고 말했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다. 군산과 남원에서 발생한 약제 때문에 전북 탈출을 작심한 이들이 늘고 있는 게 팩트이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현상 앞에서 이마를 짚어야 한다. 인구 유출의 역사가 오래인데 혁신도시가 발전 측면만 미련을 둔 채로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전북은 고령자들의 고장

이 돼버렸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이만 고장을 지키고 있으니 지역의 현실이 딱하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분발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 비전 제시가 아니다. 미래 비전 제시는 지금 영양가가 별로 없다.전북도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의 살림살이를 먼저 챙겨야 한다.

현재 전북의 인구가 185만이지만 안심해선 안된다. 180만 명선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불안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역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도 못 견딜 일인데 남원의 서남대는 폐교가 되었고 군산 GM은 폐쇄 후 이전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대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작금의 현실에 도민들은 정신이 사남다. 정말이지 이 난감한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 앞으로도 계속될 터이다. 전북도는 떨치고 일어 나야 한다. 인구 감소 해결책과 관련해서 뭘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독자제언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봄철 날씨가 따뜻해져 운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순간의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졸릴 때 운전을 하면 평소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운전자가 졸음을 느끼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반드시 휴게소에 들러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장시간 휴식을 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피로를 줄이는 방법이다.

휴식을 취할 때는 가벼운 체조를 몸을 풀어주고 자동차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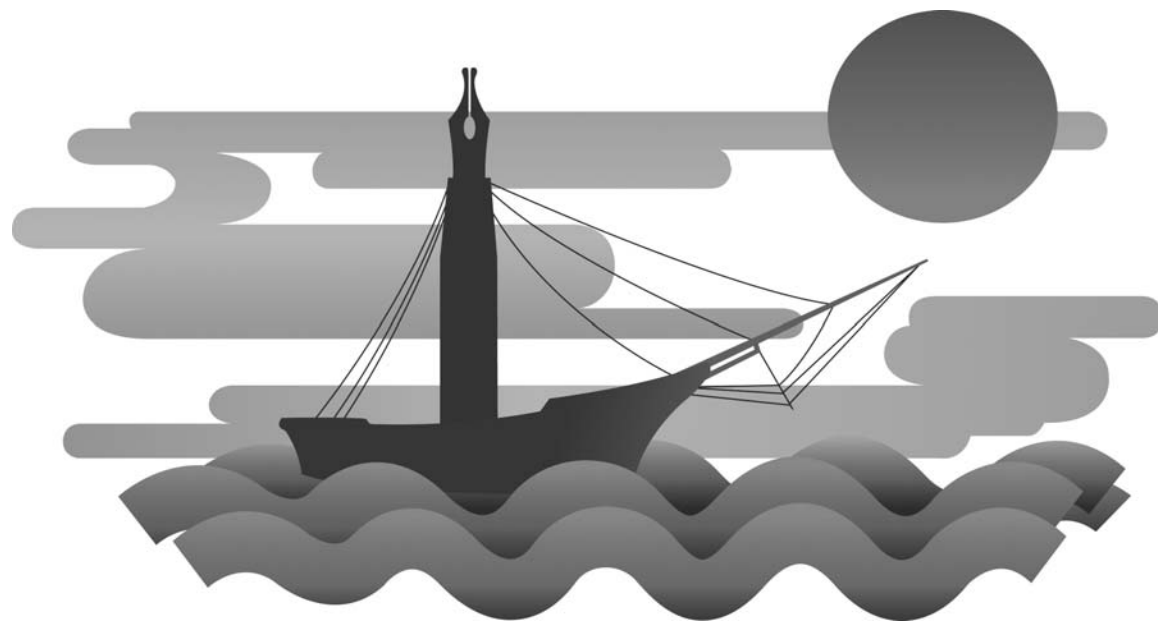
또한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경우 바로 운전하기 보다는 어느정도 휴식을 취한 후 여유있게 운전을 하

는 것이 식후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혼자 운전을 할 경우 경쾌한 음악을 듣거나 껌을 씹고 창문을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동승자가 있을 경우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까지 망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신서문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